

전남 서남권 산업위기지역 지정...조선업 실태와 정부 지원책

2년새 매출 40% 줄고 고용 반토막 위기 대응 5개 사업 예산 추경 반영

1만 7000개 업체 문 닫아 대불산단 가동 84%→59% 전남도 4조 4370억원 신청

전남 조선해양산업은 현대중공업·대한조선 등 대형조선소에 종속된 산업구조로,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영남·목포·해남지역에 밀집돼 있다. 세계 조선시장 불황으로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가 급감,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한파를 불렀다.

이른 선박 건조·불록을 생산하는 기자재·협력업체의 하청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휴폐업 업체가 속출했고, 파장은 지역산업 전 분야로 확산됐다.

◇전남 조선산업 위기 실태=최근 2년 사이에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했다. 전남 조선산업 전체 매출 39.2%, 고용 44.9% 급락했다.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5년 매출 4조5040억원에서 2017년 2조7710억원으로 38.5%(1조7330억원),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6065억원에서 4389억원으로 27.6%(1676억원) 감소했다. 조선소의 매출 감소는 기자재업체인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45.2%, 1조6652억원→9120억원)로 이어졌다.

매출 감소는 구조조정을 불렀다. 2015년말 2만7461명에 달했던 지역 조선업 종사자수는 올해 1월 1만5127명으로 1만2334명(-44.9%)이 직장을 잃었다. 휴폐업 업체도 속출했다. 최근 3년새 목포 1만4768개, 영암 2171개 등 총 1만6939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산단 가동률도 2015년 말 84%에서 지난해말 59%로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조선산업 불황은 전력사용량에서도 나타났다. 2015년 하반기 6개월 평균 5009만3000kWh를 사용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3547만2000kWh를 기록, 29.2% 줄었다. 조선업 위기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박이 심화되고, 전문인력 외부 유출이 심해져 조선산업이 살아나면 인력수급의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정부 지원 어떻게=전남도는 지역현안 사업으로 해경서부정비장 등 국책기관 유치, 대체 및 보완산업,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역상권활성화 등 총 198개 사업 총 4조4370억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인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06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 편성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전남 3개 시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상권의 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년 본예산에도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비롯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정치권 "환영"=목포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목포시는 이날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 각종 SOC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추가 국비 지원이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목포, 영암, 해남에서 신청한 사업이 확정되고 관련 예산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병완 원내대표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평화당 큰 역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목포·영암·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는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위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뒤통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포와 영암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상태가 최악이었음에도 전남도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민주평화당은 당시 고용노동부 등을 방문,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을 약속받아서 5월3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며 "그러나 당시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지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1조2천억 전기차 투자 유치 임박"

국내 완성차 기업 연산 10만대 규모 생산라인 유치 조율중 흥영표 민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큰 선물 준비돼 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친환경 자동차 투자유치가 조만간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시는 자동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태세를 갖춰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를 찾은 여당 원내대표도 '광주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임박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투자규모 1조

2000억원, 생산규모 연간 10만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투자 유치를 추진중이다. 시의 투자유치 대상은 완성차는 물론 주요 부품생산 기업까지 모두를 망라한다. 자동차 제조 방식도 기업이 소재와 부품을 생산·조립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부터 기업 간 위·수탁 모델도 가능하다. 투자 방식은 1개 기업이 '단독 투자'하는 것과 2개 기업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투자', 지역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다.

특히 광주시는 합작투자의 경우 시와 함께 완성차, 다수의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신설법인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과 부품업체, 지역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투자액 기준 최대 10% 이상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75%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시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최근 광

주를 찾은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흥 원내대표는 최근 광주를 찾아 "광주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임박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큰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력 완성차 기업의 전기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가 막판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흥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투자유치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3월 광주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에서 밝힌 대로 적정임금과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기업투자 유치의 핵심 조건 중 하나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고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적정임금의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투자의향을 가진 국내외 자동차 관련 기업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선 기자 chadol@kwangju.co.kr



문대통령 국무위원 차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국무회의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이르면 내달 25일 특검 수사 착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통과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 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

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0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